

‘집단적 자위권’의 다음은……

우라베 노리호(浦部法穂)

호각칸(法学館)헌법연구소 고문

2014년 5월 12일

아베(安倍)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해석의 변경’을 이번 국회 후에도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초에는 이번 국회 중에 각의 결정을 목표로 했지만, 반대론이 뿌리깊은 공명당(公明党)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 서두르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과연 공명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야마구치(山口) 대표가 ‘연립 이탈이라는 선택지는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었으니 하며 결국은 찬성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떻게 될까.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해 버리면 공명당은 완전하게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어진다. 그저 그렇게 정권에 달라붙어만 있을 뿐인 ‘권력 망자(亡者)’집단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여름까지는 ‘헌법해석 변경’의 ‘각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지의 정세이다. 1945년 패전 이후 곡절을 겪으면서도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로 계속 존재해 온 일본은 ‘전후 70년’을 눈앞에 두고, ‘전후’에 종말을 고하며 다시 새로운 ‘전쟁 이전’으로 걸어갈 것인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것, 그리고 이를 내각에 의한 ‘해석 변경’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5월 3일에는 많은 신문들이 아베 정권의 이러한 헌법 파괴를 비판하는 논설을 게재하였다. 아베 수상은 이러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전혀 살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독주를 하려고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최근 아베 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여기 저기 외국에서 으레 강조하고 있

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정보 은폐와 교육통제·매스컴에 대한 지배로 국민의 사상·언론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의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민의를 무시하는 정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법의 지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헌법에 의한 권력 통제를 자기 맘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헌법을 ‘해석’하여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도 전부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베 씨이며 아베 정권인 것이다. 아베 씨가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말할 때에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가치에 무게를 두지 않는 중국과 북한(최근에는 특히 중국)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아베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일본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한다. 아베 정권의 폭주를 이대로 허용해 버린다면, 일본은 확실하게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닐 것이다.

아베 씨의 폭주를 막지 못하여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일본의 자위대가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해석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자위대에 들어가면 전쟁터에 파병이 되고, ‘전사(戰死)’도 현실문제로 각오해야만 한다. 지금도 자위대원은 여차하면 ‘전사’까지도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전 경험도 없고 실제로 전사자도 나온 적이 없는 지금과 실제로 전쟁을 하여 몇 사람의 전사자가 나온 뒤와는 ‘각오’의 현실성·절박성이 크게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위대에 들어가고자 하는 젊은이가 지금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어쨌든 실업이나 불안정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한편에서는, ‘힘들다’, ‘월급이 적다’ 는 등의 이유로 일손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있는 업종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출생률 감소로 젊은이의 숫자 자체가 감소해 가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처할 필요한 수의 자위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대책을 취하게 될 것인가?

교육을 통해서 ‘애국심’을 주입시키는 것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을 강화하고, 정치에 의한 교육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정보 통제와 마스크를 통한 여론조작도 중요할 것이다. 이 또한 아베 씨는 ‘특정비밀보호법’과 NHK회장과 경영위원 인사를 통해 이미 착수 완료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필요한 수의 자위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을 가진 수단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병역의 의무화이다. “또다시 징병제라고 떠들 것인가? 현대의 군대에는 고도화,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하므로, 징병으로 비전문가를 끌고 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징병제와 같은 것은 필요 없는데”라는 식의 목소리가 ‘우파’로부터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징병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하여 자위대에 입대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를 입대시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징병제의 여부와 관계 없이 마찬가지이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위대원 모집도 쓸데없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고도화,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얼핏 그럴 듯하게 들릴 지도 모르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완전히 파탄된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사이비 논리’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집단적 자위권’의 다음에는 병역의 의무화=징병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징병제는 헌법 13조와 18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이지만, 이는 내각이 「해석 변경」을 하면 되는 일이니 언제라도 가능하다. 전쟁이 일어나도 싸우는 사람은 자위대원이니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면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야말로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자신만의 생각일 뿐이다. ‘나라를 지킨다’, 혹은 ‘영토를 침범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허공에 뜬’ 논의가 아니라,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

는데 그렇게 되어도 좋은가에 대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 ‘땅에 발을 딛고’
생각해야만 할 때이다.